정책/ISSUES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경제를 대비하는 혁신적 사회인가?

박병무[1]

1.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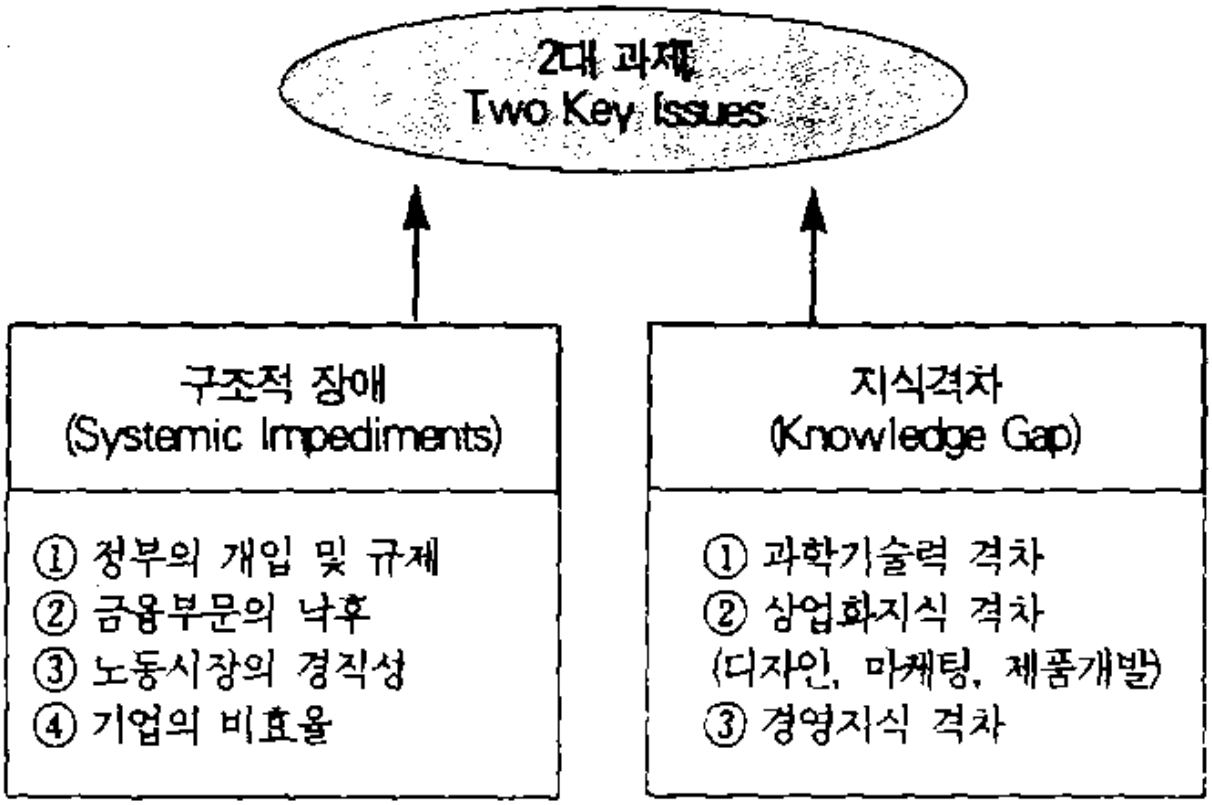
21세기를 우리는 한마디로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IBRD)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1997년 말부터 불거져 나온 한국의 경제혼란은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의 경제·사회의 현안문제는 결국 구조적 장애와 지식격차의 문제로 요약된다.

먼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구조적 장애요인으로는 정부의 개입 및 규제, 금융부문의 낙후,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기업의 비효율성이다.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는 지식격차의 문제는 과학기술력의 격차,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제품개발 등과 같은 상업화지식의 격차, 그리고 경영지식의 격차 등을 포괄한다.

구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교육부문(특히 대학부문), 정치부문, 그리고 사회안전부문과 같이 더욱 근원적인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이후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고용비 저효율"의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증대, 고용창출, 경제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는 한국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부즈알랜 해밀턴 한국보고서』와 세계은행 『98개발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선진국에 대비한 지식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표준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식격차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일등국가가 될 수 없음을 한국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식격차의 해소는 IMF 위기



이후 표류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임과 동시에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대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 지식기반사회 경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다. 즉,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말한다. 이 지식에는 학문적 지식, 실용적 지식 그리고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이 모두 포함된다. 지식은 데이터나 정보보다 상위단계의 개념이며 지혜보다 낮은 단계의 개념이다.

세계은행은 지식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기술자체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technology/know how)으로서 여기에는 영양섭취, 산아제한, S/W 엔지니어링, 회계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속성과 특성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이다. 제품의 품질, 근로자의 성실성, 기업의 신뢰도 등 조직과 사물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구분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열하는 know - how, know - why, know - what, know - where, know - when, 그리고 know - who를 함축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지식의 선진권과의 격차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 기업, 그리고 국가가 주체(players/actors)가 되는 국가지식시스템의 개념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각 개별 주체 및 수준에서 지식창출, 지식전파, 지식활용, 그리고 지식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성공적인 지식혁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부터는 국가경쟁력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실패사례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그 이유는 호주의 실패 원인이 부처간 이기주의 등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 및 문화적 문제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지식혁명 노력은 초기의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처간 이기주의와 이에 따른 종합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당국과 관련기관간의 조화와 협

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 추진, 평가와 향후과제 마련 등이 비체계적으로 진행된 점 등이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지식격차의 해소를 위한 혁신적 사회구축

세계은행은 한국과 같은 추격국가의 지식격차해소 방안은 지식습득과 흡수, 그리고 지식의 원활한 교류임을 강조한다.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해외로부터 습득하는 방법에는 자유로운 무역,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그리고 기술합작 등이 전형적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습득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은 대체로 교육체계나 교육방법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수하는 정규교육과 같은 기본교육, 사회에 진출한 이후 받을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 과학분야 등을 포함하는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는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교육체계 외에도 비형식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를 각 개별 주체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창출, 습득 및 흡수해서 축적되는 개별지식을 모두 하나로 집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교류는 내부 및 외부 개방화를 통한 지식 네트워킹체계 구축, 즉 국가(혹은 특정 지역)지식 체계구축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과연 지식 격차 해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와 배경을 갖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와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질성(homogeneity)이 매우 강한 사회이다. 단일민족에 의해 형성된 문화와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지금 우리는 다양함, 개방화를 통한 혁신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정치·사회, 법, 경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의 모델을 수없이 도입해 왔으나 이를 제대로 소화·흡수해서 우리 고유의 모델에 체화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IMF위기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동질성이 강한 만큼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미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네트워크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선진북미의 네트워크에 매우 의존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역사가 짧고, 여러 인종이 혼합된 상태로 살아 온 北美는 모든 면에서의 다양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일찍이 더 많이 느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의 동질성은 경우에 따라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확실한 것은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진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특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식기반경제와 혁신적 사회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사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미래 지향적인 혁신적 사회는 자연환경과 국민복지에 대해 친화적이며 동시에 경쟁적인 혁신을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적 사회의 구성원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 능력, 경쟁력, 지식 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들은 공동목적, 신뢰와 협력, 정열, 관심과 신의 등 혁신에 효과적인 잠재력을 지원·육성한다. 또한 자기자신과 상대방 상호간의 이익,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호 생산적인 내외부 관계의 구축과 유지에 힘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이해단체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조차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혁신적 사회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으며, 진정한 기회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혁신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혁신적 활동을 촉발하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기 위한 공개토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험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철저하게 가지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또한, 실수는 학습의 중요한 원천임을 잘 알며, 협력과 경쟁으로부터 오는 상호이익의 중요성과 네트워킹과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역설과 딜레마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혁신적 사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혁신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혁신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은 사람들과 조직, 지역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생성되며 진행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혁신은 오히려 사회적 딜레마, 부적절한 연계 등을 유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MF위기를 사전에 예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경제와 과학, 그리고 기술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혁신을 생성, 발전, 전파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 우리 나름의 혁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기술이나 과학 등을 도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맞는 내용의 혁신을 도입하고, 이후 도입한 혁신을 진정한 우리의 혁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권위 있는 명령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은 사회구성원의 창의, 헌신과 사명감, 강인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배양하는 어떤 행동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연구해서 이를 토대로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적 사회와 혁신 그 자체의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혁신은 결정적인 생존기법, 특히, 급변하는 사회속에서의 생존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 월등한 과학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 각국들은 더욱 혁신적인 경제 및 사회를 구축하여 21세기를 대비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기 이전에 또 다른 장애물, 즉 IMF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거품제거와 생산성 향상은 바로 진정한 혁신적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달려 있다. 지금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불신감과 경제, 사회, 정치계의 지도계층들의 겉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혁신사회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에 빠진다.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혁신기법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람 속에 존재한다. 혁신적인 사람을 개발하고, 이들을 유치, 지원, 보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수하고 혁신적인 지식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5. 혁신적 사회와 정부의 역할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은 결정적인 생존문제이다. 이제는 지식의 축적, 그리고 축적된 지식의 활용이 생산의 주요 요소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의 증가와 자본 및 자원의 증가, 그리고 기술진보 등에 의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지식에 의해 그것이 가능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혁신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개방과 네트워킹, 그리고 지역정신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혁신주체는 상호 협조자이지 적이나 지배자가 아니다. 따라서 비방과 혼란을 조장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 독려, 지원을 통해 "우리는 한 배에 탄 운명"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지역, 네트워킹, 협력, 공통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각자의 업무에 대해 흥미와 긴장을 느끼고 건전한 경쟁과 개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의식을 소유하게 된다.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이 가능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혁신주체들은 비혁신적인 행동이나 안전만을 추구하는 무사 안일한 행동으로 일관하게 된다. 개방적 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능력 있고 혁신적인 인재들은 더욱 혁신 지향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고급두뇌들의 해외유출이나 귀국 급감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이다.

·혁신가들이 법규와 규제를 스스로 학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적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존 법규를 개선함으로써 법제도와 응용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 및 철폐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장기비전과 병행해서 단기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전략 수행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층 더 근본적인 원인, 동향 및 향후 예상되는 결과 등을 조명하는 장기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혁신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학입학 중심의 암기식 교육에 너무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중심의 교육혁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념을 지식기반사회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대학의 교육과 연구체제, 그리고 대학교수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부 중심의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개혁도 필수적이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하려면 정부는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정태적인 고용안정의 개념으로부터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동태적 고용안정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지식근로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능력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체제, 그리고 고용네트워킹을 통한 고용기회 정보제공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6. 결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며 지금의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국을 혁신적인 국가로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혁신성은 궁극적으로 사람들과 이들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번영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식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유치하고 보유해야만 한다. 개방화 시대에는 우수한 혁신적 인재들은 정부나 기타 억압적인 집단에 의해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과감하게 한국을 떠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외국의 우수한 두뇌와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주석1 과학기술부 장관자문관(Tel: 02 - 500 - 3248/ e - mail: barkpm@mostws.most.go.kr)